16일 한일 정상회담… '그랜드바겐' 결실 보나

윤 '징용' 비판 여론 속 방일
양국 새 파트너십 선언할 듯
'일괄매듭' 기시다 호응 관건

오는 1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그랜드바겐'(일괄 타결) 구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의 종합적·포괄적 해결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가 윤 대통령의 조기 방일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윤 대통령의 1박2일 방일 첫날인 16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연이어 진행한다.

회담 당일, 12년 만의 공동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공식화를 비롯해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독도를 처음으로 방문하자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경색됐고, 이후 위안부·강제징용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악화했다.

한일협력의 상징이었던 '셔틀외교' 역시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방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2017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뇌관'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는 조기에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서 지난 6일 '한국의 독자 해결' 발표로 일단 매듭지어진 상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불안정,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 징용 갈등에서 파생된 일련의 문제들은 해결이 더딘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담판에서 수년간 얽혀 있던 갈등 현안들을 조속히 풀고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 갈등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찾는 '그랜드바겐' 접근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후 사흘 만에 윤 대통령 방일 초청을 발표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내홍·측근 사망' 겹악재 뚫을 돌파구는?

사법리스크 선명 부각
인적쇄신 가능성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에 따른 당 내홍에 이어 경기지사 시절 측근 사망이라는 '겹악재'에 직면했다.

당내 소통을 늘려가는 등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자신이 연루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최측근이 사망하며 '사법 리스크'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비명(비이재명)계 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하자 이를 해소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분열은 필패'라는 의견이 많고, 사퇴 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단은 불안하게나마 이 대표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지난 9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었다.

이 대표는 10일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의 사망이)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저 때문이냐"라고 항변했지만 비명계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졌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씨 사망으로 여권에서 사법리스크를 다시금 물고 늘어지는 만큼 이 대표가 물러나야만 당이 떠안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까지 거취를 고민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대표직 사퇴 없이 이 대표가 위기를 돌파할 방안으로 인적 쇄신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애초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데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다음 달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원내대표 경선 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잇단 악재로 시점이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시각은 이 대표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가진 '온건파' 비명계 사이에서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비명계가 그간 주요 당직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총선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직을 요구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이 대표 측이 이처럼 비중이 큰 당직을 비명계에 줄 수 있느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 대표,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힘, 차기 원내대표 경쟁 본격화

'PK대표·친윤지도부' 변수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선출에 맞춰 당내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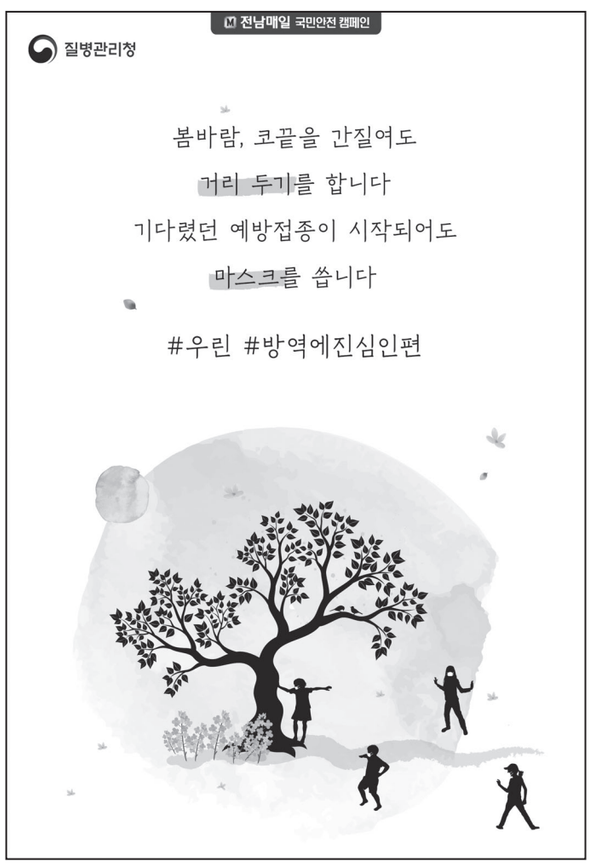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하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작년 9월 선출된 주 원내대표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4월 8일까지만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원내대표 선거는 4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주 원내대표가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뒤 동반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당내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선거일은 보름 정도 늦춰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4월 하순 방미 일정 등을 고려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후보로는 김학용(4선·경기 안성), 박대출(경남 진주갑)·윤재옥(대구 달서을·이상 3선) 의원이 꼽힌다. 이들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굳히고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인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3선의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기현 대표가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인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총선 승리가 최대 목표인 만큼 '투톱'의 지역 안배 측면에서 김 대표와 같은 PK 출신을 원내대표로 세우는 것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반면, 정치공학적 지역 안배론에서 벗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야 투쟁력과 돌파력을 원내사령탑의 주요 능력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곧 발표될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 인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변수로 꼽힌다. 이들의 지역이나 계파 등에 따라 유력 주자가 바뀔 수 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전원 '친윤'(친윤석열)인 점이 '유권자'인 소속 의원들 표심을 흔들면서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투톱'을 모두 친윤으로 채워 완벽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원내사령탑은 친윤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